

[종합·해설]

삼성광주공장 재배치냐 이전이냐

이건희 회장 '생활가전 이전' 발언 파문 확산
채부사장 "프리미엄급 광주 생산 변함 없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생활가전리인' 개도국 이전' 발언은 결국 생활가전 생산라인의 재배치거나, 일부 라인의 해외이전이나로 귀결된다.

그러나 삼성측은 "광주공장의 경우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해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미"라는 원론적인 해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생활가전 체계가 개편되면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끊이지 않는 논란=이 회장의 발언을 두고 삼성 전자가 생활가전사업에 중대한 방향전환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꾸리를 물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익이 적은 생활가전 일부 분야를 접고 다른 주력업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 회장의 언급은 생활가전 분야를 포기하겠다는 것보다는 가전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재배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차단했다.

12일 삼성광주전자 채동석 부사장이 박광태 광주시장을 면담, "광주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프리미엄급 생활가전 생산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채 부사장은 "3년 전부터 삼성전자가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광주를 생활가전의 중심으로 정했다"면서 "지필 등 고부가가치 제품은 광주에서 생산하고, 윈도어(One-Door) 냉장고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품은 태국·중국·멕시코 등 해외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이 일부 라인의 해외이전으로 잘못 전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채 부사장은 "이번 논란은 지역민들이 삼성광주전자에 거는 기대가 너무 큰 탓에 나온 것인 만큼 생산 상황, 협력업체의 품질개선 등을 통해 국내외 경

성전자 생활가전 부문은 지난 2002년 흑자를 마지막으로 2003년 1천100억원, 2004년 500억원, 2005년 900억원, 2006년 1천800억원의 적자를 냈다. 반면 삼성광주전자는 고유가·환율변동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 390억원의 흑자를 냈다.

삼성광주전자의 매출은 25개의 수도권 협력업체가 광주로 이전하기 전인 2003년 1조7천억원에 불과했으나, 2004년 3조원으로 급상승했다. 2005년 3조4천억원, 2006년 3조1천억원에 이어 올해는 지난해 대비 5~10% 신장이 예상된다.

협력업체는 2003년 80여개에서 지난해 107개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동안 생산유발효과도 4천억원에서 1조원에 육박하는 성장을 보였다. 고용인원의 경우 협력업체를 포함해 9천여명에서 1만2천400여명의 늘어났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생활가전 구조조정 시사 발언 이후 지역 경제계에 파문이 일자. 12일 삼성광주전자 채동석 부사장이 박광태 광주시장을 면담, 광주에서의 고부가가치 프리미엄급 생활가전제품 생산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서남권 종합발전 계획'에 반영을 요구할 전남도 자체 계획이 12일 확정됐다.

특히 전남도는 이번 자체 계획을 통해 목포·무안·신안지역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계획안에 영암·해남·강진·완도·진도를 포함하고 기존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계획에 신규사업을 대폭 추가해줄 것을 요구해 관찰 여부가 주목된다.

전남도는 서남권 종합개발계획에 해남·영암 관광레저 기업도시(J프로젝트)를 비롯해 강진·완도·진도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지역여론을 감안해 사업대상구역 확장이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면 진도의 조류발전, 완도의 해양식물연구센터 건립 등 사안별로 전체 사업취지에 부합되는 분

서남권 개발 진도까지 포함 무안공항에 고속철 정차역

전남도 '서남권 종합발전' 반영 요구 61개 사업 확정

야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날 전남도가 발표한 서남권개발 종합사업은 모두 61개로 구분된다. 전체 사업비는 26조원으로 국비 14조 5천억원, 지방비 8천억원, 민자가 10조 7천억원이다.

총 61건의 사업은 크게 서남권 물류거점 육성 등 '4대 정책과제(40건, 사업비 13조원)'와 '주요 인프라 구축 사업(21건, 사업비 13조원)'으로 나

뉘 계획됐다. 4대 정책과제는 ▲서남권 물류거점 구축 3건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15건 ▲신·재생에너지 보급기지 조성 7건 ▲복합관광클러스터 조성 15건 등이다.

서남권 물류거점 구축을 위해 무안 국제공항과 목포신항을 중심으로 농산물·첨단경량부품·중고자동차 및 건자재 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특화산업 고도화를 위해 무안국

제공항 주변의 토지를 활용한 첨단시설원예단지를 조성하고, 대불산단 혁신클러스터 구축, 중소형 조선산업지원센터 건립, 서남권 조선타운을 조성한다.

주요 인프라 구축의 경우 사업건수는 도로·철도·공항·교량 등 14건, 사업비는 11조원이며, 산업단지·항만·도서 식수원 사업 등이 7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2조1억원이다.

한편 정부는 올 5월까지 서남권종합개발계획을 확정해 6월 임시국회에서 '(가칭) 서남권 등 낙후지역투자 촉진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 제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오는 9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서남권 종합개발사업을 반영해 필요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광주일보 2007 테마

이젠 實利다

<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길

경쟁력 제고 생존 필수전략 책임·배려로 신뢰 쌓아야

삼성광주전자에 청소기용 브러쉬를 공급하고 있는 신아슬루산(장성군 동화면·대표 조영현)은 환율 900원에 대비, 2005년 모기업인 삼성광주전자와 'V-900'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양쪽에서 20명씩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6개월 동안 1인당 생산성향상: 6.0→8.97개(33%), 인건비 절감: 64→48명(25%), 불량률 개선: 2만7천→8천930 PPM(66%) 등을 통해 5억여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올렸다. 광주·전남지역내에서 대기업과 중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상생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6개월만에 원가절감 5억여원

고유가, 환율하락, 제조업의 해외탈출 등으로 심각한 경제위기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은 생존을 위한 선택적인 요건이 아니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 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이같은 프로그램은 지역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남산단내 A자동차 부품업체 대표는 "기업경쟁력 측면에서 부품·소재는 제조업 생산원가의 63%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성장은 결국 대기업 외제품의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과정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상생협력의 핵심은 힘있는 쪽(대기업)의 양보와 배려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쉬운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양쪽이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동등한 위치에서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협력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중소기업은 혁신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단가 후려치기 등 악습 떨쳐야

기존의 수직적 관행에서 적용됐던 '납품단가 후려치기', 높은 어음결제비중,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때 넘기기 등을 떨쳐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회가 지역내 1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응답업체들이 '대기업의 납품불량 감소'와 함께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경영애로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이들 응답업체 가운데 63%가 대기업이 나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한다는 바람을 보였다.

인센티브 제공 정부 지원도 절실

이와 함께 정부도 대-중소기업 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 기업에게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협력강화를 유도하고, 이와 관련된 환경조성과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광주·전남경총 관계자는 "대-중소 상생파트너십은 깊은 신뢰가 생명"이라며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협력업체 대금지급을 3개월내로 잡고, 합리적인 원가 절감 목표를 내건 뒤 협력업체와 함께 고민하는 일본 도요타의 상생정신을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고유가, 환율하락 등 심각한 경제위기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전략이 되고 있다. 삼성광주전자와 긴밀한 상생프로젝트를 진행한 장성 신아슬루산 생산현장.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서남권 개발 진도까지 포함
무안공항에 고속철 정차역**

전남도 '서남권 종합발전' 반영 요구 61개 사업 확정

야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날 전남도가 발표한 서남권개발 종합사업은 모두 61개로 구분된다. 전체 사업비는 26조원으로 국비 14조 5천억원, 지방비 8천억원, 민자가 10조 7천억원이다.

총 61건의 사업은 크게 서남권 물류거점 육성 등 '4대 정책과제(40건, 사업비 13조원)'와 '주요 인프라 구축 사업(21건, 사업비 13조원)'으로 나

뉘 계획됐다. 4대 정책과제는 ▲서남권 물류거점 구축 3건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15건 ▲신·재생에너지 보급기지 조성 7건 ▲복합관광클러스터 조성 15건 등이다.

서남권 물류거점 구축을 위해 무안 국제공항과 목포신항을 중심으로 농산물·첨단경량부품·중고자동차 및 건자재 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특화산업 고도화를 위해 무안국

제공항 주변의 토지를 활용한 첨단시설원예단지를 조성하고, 대불산단 혁신클러스터 구축, 중소형 조선산업지원센터 건립, 서남권 조선타운을 조성한다.

주요 인프라 구축의 경우 사업건수는 도로·철도·공항·교량 등 14건, 사업비는 11조원이며, 산업단지·항만·도서 식수원 사업 등이 7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2조1억원이다.

한편 정부는 올 5월까지 서남권종합개발계획을 확정해 6월 임시국회에서 '(가칭) 서남권 등 낙후지역투자 촉진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 제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오는 9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서남권 종합개발사업을 반영해 필요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서남권 개발 진도까지 포함
무안공항에 고속철 정차역**

전남도 '서남권 종합발전' 반영 요구 61개 사업 확정

야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날 전남도가 발표한 서남권개발 종합사업은 모두 61개로 구분된다. 전체 사업비는 26조원으로 국비 14조 5천억원, 지방비 8천억원, 민자가 10조 7천억원이다.

총 61건의 사업은 크게 서남권 물류거점 육성 등 '4대 정책과제(40건, 사업비 13조원)'와 '주요 인프라 구축 사업(21건, 사업비 13조원)'으로 나

뉘 계획됐다. 4대 정책과제는 ▲서남권 물류거점 구축 3건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15건 ▲신·재생에너지 보급기지 조성 7건 ▲복합관광클러스터 조성 15건 등이다.

서남권 물류거점 구축을 위해 무안 국제공항과 목포신항을 중심으로 농산물·첨단경량부품·중고자동차 및 건자재 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특화산업 고도화를 위해 무안국

제공항 주변의 토지를 활용한 첨단시설원예단지를 조성하고, 대불산단 혁신클러스터 구축, 중소형 조선산업지원센터 건립, 서남권 조선타운을 조성한다.

주요 인프라 구축의 경우 사업건수는 도로·철도·공항·교량 등 14건, 사업비는 11조원이며, 산업단지·항만·도서 식수원 사업 등이 7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2조1억원이다.

한편 정부는 올 5월까지 서남권종합개발계획을 확정해 6월 임시국회에서 '(가칭) 서남권 등 낙후지역투자 촉진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 제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오는 9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서남권 종합개발사업을 반영해 필요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서남권 개발 진도까지 포함
무안공항에 고속철 정차역**

전남도 '서남권 종합발전' 반영 요구 61개 사업 확정

야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날 전남도가 발표한 서남권개발 종합사업은 모두 61개로 구분된다. 전체 사업비는 26조원으로 국비 14조 5천억원, 지방비 8천억원, 민자가 10조 7천억원이다.

총 61건의 사업은 크게 서남권 물류거점 육성 등 '4대 정책과제(40건, 사업비 13조원)'와 '주요 인프라 구축 사업(21건, 사업비 13조원)'으로 나

뉘 계획됐다. 4대 정책과제는 ▲서남권 물류거점 구축 3건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15건 ▲신·재생에너지 보급기지 조성 7건 ▲복합관광클러스터 조성 15건 등이다.

서남권 물류거점 구축을 위해 무안 국제공항과 목포신항을 중심으로 농산물·첨단경량부품·중고자동차 및 건자재 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특화산업 고도화를 위해 무안국

제공항 주변의 토지를 활용한 첨단시설원예단지를 조성하고, 대불산단 혁신클러스터 구축, 중소형 조선산업지원센터 건립, 서남권 조선타운을 조성한다.

주요 인프라 구축의 경우 사업건수는 도로·철도·공항·교량 등 14건, 사업비는 11조원이며, 산업단지·항만·도서 식수원 사업 등이 7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2조1억원이다.

한편 정부는 올 5월까지 서남권종합개발계획을 확정해 6월 임시국회에서 '(가칭) 서남권 등 낙후지역투자 촉진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 제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오는 9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서남권 종합개발사업을 반영해 필요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